

공 개



의안번호	제 201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6. 9. (제 11 차)

의  
결  
사  
항

미래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6. 9.

## 1. 의결주문

미래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 2. 제안이유

미래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미래신용정보(주)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개정전의 것)을 위반한 행위에 관해, 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17차 제재심의위원회(2021.5.3.) 심의필

<별지>

미래신용정보(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기관(미래신용정보(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 10,960만원

○ 부과사유

가.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나. 소속 위임직 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개정전의 것) 제27조, 제52조, 「동법 시행령」(2020.8.4. 개정전의 것) 제38조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2. 개별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 2. 조치사유(지적사항)

### 가.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입사실 통지의무 위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 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미래신용정보(주)는 채권자인 (주)○○○○○○○, (주)△△△, (주)▽▽▽▽▽로부터 연체 2개월 이하의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고,

\* 미래신용정보(주)에 따르면 채권자 3개사와 요금상담센터 계약 등을 체결하고 연체 2개월 이하의 채권에 대해 단순 미납안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상환금액을 수령하며, 상환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등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음

- 연체발생 채무자에게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 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들에게 수입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2020.11.20. 기준 3,890건\*)

\* 미래신용정보(주)는 매월 1일(△△△, ▽▽▽▽▽) 및 8일(○○○○○○○)에 미납요금 회수를 의뢰받아 고객에게 납부를 요청하고 있으며, 위반건수 3,890건은 2020.10.1. 및 2020.10.8. 또는 2020.11.1. 및 2020.11.8.에 회수의뢰 받아 2020.11.19.까지 미상환된 채권 중 미래신용정보(주)가 고객에게 발신하여 통화가 이뤄진 기록이 확인된 건수임(Out-Bound)

### 나. 소속 위임직 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개정전의 것) 제27조 제9항 제2호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제4호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미래신용정보(주)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추심인 □□□ 등 2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 \* ① □□□ : 2019.9.3.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미래신용정보는 소송행위에 관한 권한이 없음에도 소송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거짓표시 금지 (제11조 제3호) 위반
- ② ◇◇◇◇ : 2020.1.16.~2020.2.3.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거짓표시 금지 (제11조 제4호) 위반

## 관계법규 등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500만원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직전 처분의 다음 차수에 따른 처분을 한다.

나. 과태료 금액란 중 괄호 안의 금액은 과태료 대상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부과기준을 말한다(법 제17조제4항 관련).

####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규정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나.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와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만 해당한다)	법 제17조 제2항제1호	150	300	700
사. 법 제11조제3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5호	150	300	600
아. 법 제11조제4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5호	150	300	60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⑨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45조(감독·검사 등)**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제5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개정전의 것)】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⑨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45조(감독·검사 등)**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제5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 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포.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법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2조 제3항 제5호의2	2,400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8.4. 개정전의 것)】

**제35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나.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터.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법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2조 제2항 제5호의2	2,400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 과태료 부과기준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 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 (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 나. 감경 사유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 기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 3. 감봉

-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중용한 자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3. 15.>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미래신용정보(주)

2. 제재조치일 : 2021. 6. 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0,960만원 부과
직원	감봉3월, 견책, 주의 각 1명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90만원 부과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입사실 통지의무 위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 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미래신용정보(주)는 채권자인 (주)○○○○○○○, (주)○○○, (주)○○○○○○○로부터 연체 2개월 이하의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고,

\* 미래신용정보(주)에 따르면 채권자 3개사와 요금상담센터 계약 등을 체결하고 연체 2개월 이하의 채권에 대해 단순 미납안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상환금액을 수령하며, 상환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등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음

- 연체발생 채무자에게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 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들에게 수입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2020.11.20. 기준 3,890건\*)

\* 미래신용정보(주)는 매월 1일(○○○, ○○○○○) 및 8일(○○○○○○)에 미납요금 회수를 의뢰받아 고객에게 납부를 요청하고 있으며, 위반건수 3,890건은 2020.10.1. 및 2020.10.8. 또는 2020.11.1. 및 2020.11.8.에 회수의뢰 받아 2020.11.19.까지 미상환된 채권 중 미래신용정보(주)가 고객에게 발신하여 통화가 이뤄진 기록이 확인된 건수임(Out-Bound)

### <관련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및 제18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 나. 소속 위임직 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개정전의 것) 제27조 제9항 제2호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제4호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 미래신용정보(주)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추심인 ○○○ 등 2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 ① ○○○ : 2019.9.3.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미래신용정보는 소송행위에 관한 권한이 없음에도 소송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거짓표시 금지(제11조 제3호) 위반

② ○○○ : 2020.1.16.~2020.2.3.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거짓표시 금지(제11조 제4호) 위반

### <관련규정>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개정전의 것) 제27조, 제52조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8.4. 개정전의 것) 제38조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데이터 정책 과	디지털 금융 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97	02-3145-7425